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2. 17.(목) 10:00 | 배포 일시 | 2022. 2. 17.(목) 08:30  |
| 담당 부서 | 기업거래정책국<br>기업거래정책과    | 책임자   | 과 장 박세민 (044-200-4583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김민지 (044-200-4584) |
|       | 기업거래정책국<br>기술유용감시팀    | 사무관   | 김민아 (044-200-4585)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안남신 (044-200-4648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김이영 (044-200-4650) |

## 하도급분야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- 개정 하도급법령, 과징금 고시 및 기술유용 심사지침 시행 -

-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(이하 하도급법)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.
  -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  - 이에 ‘하도급법 시행령’(이하 시행령)을 개정하여 ▲기술자료의 사용기간, 보유 임직원의 명단, 의무위반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, ▲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하였다.
    - ‘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’(이하 과징금 고시)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.
    - ‘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’(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)을 개정하여 ▲법 개정예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, ▲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‘기술자료 요구서’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였다.
  -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규가 시행되면,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,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# 1

## 주요 개정내용

### 가. 비밀유지계약 내용 구체화 및 보존 의무 부과

[하도급법 제12조의3제3항 신설, 시행령 제6조 개정 및 제7조의4 신설]

-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이다.
  - 기존에는 원·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.
- 이에,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'22년 2월 18일부터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였다.
  -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②사용기간,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,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, ⑤의무 위반시 배상,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.
  -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, 과징금,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.
- 또한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.
  - 보다 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해 보존기간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조사시효와 동일하게 7년으로 하였다.

### 나.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

[과징금 고시 별표 2. 세부평가 기준표 개정]

-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범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\*에 있어, '비밀유지계약 체결' 행위는 2점이 부여되도록 하였다.
  - \*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, 이 중대성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과징금 고시의 [별표]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.
- 이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(법 제12조의3제1항)와 동일한 수준이다.

## **다. 기술자료 인정 요건 완화 (기술유용 심사지침 III. 1. ~ 3. 개정)**

-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'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'→'비밀로 관리되는'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.
- 특히,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·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,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.

## **라. 기술자료 예시 추가 (기술유용 심사지침 III. 4. 개정)**

-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하여 승인도, 설계도,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였다.

## **마.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 명확화 (기술유용 심사지침 IV. 1. 개정)**

-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,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'요구서' 제공토록 명시하여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\*를 차단하였다.
  - \* 일부 사업자는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,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기도 함
- 현 규정상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화하였다.

## **라.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(하도급법 제35조의2 ~ 제35조의5 신설)**

- \* 이는 「특허법」 제132조 및 제224조의3 내지 제224조의5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1조 내지 114조 등과 유사한 규정임
-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'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.

-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\*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(예: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)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.

\*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,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

□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, 비밀유지명령,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.

- (비밀심리절차)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된다.
- (비밀유지명령)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- (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)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,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.

## 2

## 기대 효과 및 참고 사항

-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령, 과징금고시, 기술유포 심사지침이 시행되면,
-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    -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비밀유지의무, 목적외 사용금지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침해를 예방하고,
    - 기술탈취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 
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 
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계, 업계의 의견을 수렴받아 ‘표준 비밀  
유지계약서’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‘공정위 홈페이지-정보공개’에서  
확인할 수 있다.

○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배포하여 사용  
권장을 요청할 예정이다.

\*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[www.ftc.go.kr](http://www.ftc.go.kr)) - 정보공개 - 표준계약서 - 표준  
비밀유지계약서

- <붙임> 1.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
2.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
3.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
4. 기술유포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

